



FTA 낙농대책은 반드시 생산자대책이어야 한다!



배정식
본회 지도부장

1. 들어가며

연초부터 한파 속에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자식같이 키우던 소를 땅에 묻어야 했다. 구제역 파동으로 연기된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산정체계 설명회가 뒤늦게 열렸지만, 유업체의 반대입장과 정부의 중재안 제시로 뒤죽박죽 되버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여름 더위와 잦은 비로 인해 우유생산이 급격히 줄면서 원유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곧 목장경영수지 악화로 치닫고 있다. 한EU FTA 협상이 정식 서명되고, 한미 FTA는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다. 육우 또한 전체적인 소 사육마릿수 증가속에 경락가격은 하향추세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유시장 불공정조사를 통해 유가공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불똥이 낙농가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FTA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마련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2. 2009년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결과

지난해 연말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와 함께 정책토론의장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낙농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께서 전국을 돌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설명한 낙농제도개편과 관련해 낙농가들은 현 진흥회 구조와 같은 옥상옥에 불과한 제도일 뿐 전

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협동조합으로의 집유일 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요구가 높았다. 가공유 지원방식 또한 유업체만을 위한 대책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업체가 원유의 소유권을 가진 상황에서 가공쿼터가 정상쿼터를 침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본 쿼터물량도 제대로 짜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공유를 생산할 농가가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문제를 비롯하여 낙농 단지 조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확대, 축산용 면세유 배정량 확대, 옥수수 트렌치사일리지 재조비 지원, 사료값 원가공개, 육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 등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3. 목장경영 총체적인 위기

낙농호수와 사육두수 또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지난해에 다소 둔화된 낙농호수 감소세가 금년들어 다시 5% 이상 증가되어 이제 6천4백호 남짓한 상황으로 농가의 사육의지가 급격히 떨어져 있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비가 증가된 가운데 올해들어 폭등한 조사료값과 다가올 사료값 인상 문제들은 목장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술 더 떠 이상 기후변화는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젖소의 번식장애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체세포수 등급이 저하되고, 유단백은 농축되어 급격히 증가되었고 유지방은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집유량 감소 현상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목장경영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으며 한 해의 고티머리에 서 있다.

4. 2010년도 협회 주요사업 실적은

구제역 보상체계 개선, 유대손실 보상 최초 도입

협회에서는 연초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았다. 살처분 보상과 관련해 협회로 민원이 빗발치고, 낙농과 동 떨어진 보상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였으나, 현장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행히 유대손실 보상을 도입하게 되었으나 6개월로 한정되었고, 초산 이상 임신우 및 노산우 보상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보상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기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누굴 위한 원유가격 산정체계인지...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기로 함께 따라 2008년도 유질성적을 기준으로 ±0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최된 지역설명회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연구진은 유단백 기준선을 2.9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과 기존 설명회에서 제시한 1안을 놓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업체는 현재식점에서 유단백 성적이 높아져 농가지불유대가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도 이제와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못밖았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 또한 유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개발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를 빌미로 반대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유업체는 유단백질이 높아지더라도 사유에 국한된 국내시장에서 유제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아무 의미가 없단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정부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하여 소위 정부중재안을 던지고 말았다. 생산자와 유업체간 간극이 크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키 위한 방편이었으나,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불찰이었다. 유단백 상승에 따른 리터당 유대인상 효과는 분명 있으나, 현재 유단백 상승은 분명 정상적인 추세가 아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더군다나 유량감소에 따른 유대수입이 급격히 줄어 목장경영이 비상상태인 시점에서 유대인상 효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또한, 지역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안들은 사라진 채 쌩뚱맞게 정부중재안을 내놓고 수용하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매년 협회에서는 정책개발을 위해 낙농자조금 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낙농제도개편과 원유가격 결정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선진국 낙농쿼터제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연구와 우유생산비의 합리적인 조사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구제역 등 보상비 산정과 관련해 젖소 고농력우 살처분 보상비 산정프로 그램 개발 연구도 수행하였다.

특집 2010년도 낙농육우산업을 되돌아본다

기타 주요사업들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농가 지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월간 낙농육우지와 낙농자조금 소식지 발행, 업무연락 등을 통해 협회의 활동 상황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축산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협회에서 활동을 주도해왔고,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청년, 여성, 육우분과위 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위해 대 정부, 대 국회 방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수정란이식증명서 미첨부 송아지에 대해 한우로 판정토록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해결하였고, 모 방송국의 우유 안티와 관련한 방송제작 문제도 적극 대응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우유시장 불공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언론기고, 정부와 국회활동을 통해 낙농산업의 특수성과 몰이해에서 비롯한 문제점을 부각시켜왔다.

속빈 강정, FTA 낙농대책들

한EU FTA 협상 정식서명에 따른 축산분야 지원책이 최근 발표되었다. 역시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이다. 역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은 뒤로 한 채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안하겠다는 것과 매한 가지다.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들은 거창한 구호보단 실질적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사료값 인상문제와 함께 내년도 도래하는 사료특별구매자금 상환연장 문제와 목장의 세제부담 완화대책들은 보이지 않는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득보전대책마저도 낙농부문은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FTA는 국내유업계 입장에서 보면 해외원료기지 하나를 그대로 확보하는 셈이다. 결국 수입 유제품의 범람과 미비된 낙농제도 틀 속에서 현재 부여된 퀼터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정부는 피해가 발생되면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축산의 경우 마릿수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어, 퀼터제로 생산을 제한 당하고 있는 낙농업의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생산을 규제 당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이나 타 축종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낙농업은 고농력우를 확보하여 적은 마릿수로 할당된 퀼터만큼 우유를 생산하여 경쟁력과 수익성 증대를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는 두당 조수입을 기준으로 20%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두당 조수입은 그대로라도 쿼터감축에 따른 전체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모순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낙농업은 삐감된 쿼터량에 리터당 순수익을 곱해 피해보전대책을 세워야 마땅하고 폐업지원대책 또한 마찬가지다.

5. 육우 의무자조금 추진위원회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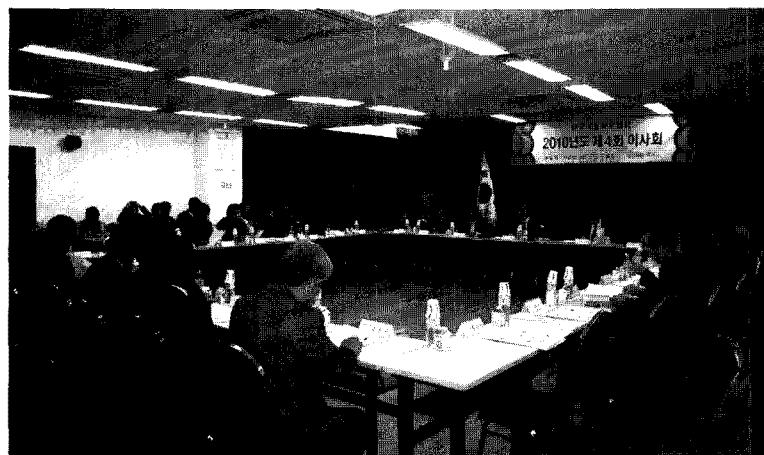


임의자조금 사업은 부족하지만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올 한해도 정부의 홍보자원 지원과 더불어 육우얼굴찾기에 매진해 왔다. 방송과 언론홍보, 주부요리교실 사업들을 알차게 진행해 왔다. 최근 유후값이 하향추세로 혹시나 닥칠 위험에 대비해서라도 육우홍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육우를 맛 본 소비자들은 한우에 못지않은 오히려 한우보다 육질이 부드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육우가 소비자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과 홍보가 중요하단걸 새삼 깨닫게 된다. 지난 10월 육우 의무자조금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산재된 육우 농기들을 하나로 묶는 노력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스스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6.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들이 추진되어야...

현재 협회에서는 FTA에 대응한 목장경영 안정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와 대국회를 통해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여왔다. 생산기반유지와

특집 2010년도 낙농육우산업을 되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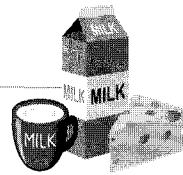


소비기반 확대, 비용절감, 환경분뇨대책들이다. 생산기반 유지대책으로는 전국단위제도개편으로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낙농조합으로의 집유일원화, 연간총량제 도입을 제시해 놓고 있다. 또한 앞서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보전 대책과 폐업보상 대책을 낙농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기반 확대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일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과 연계한 우유무상급식 실시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육우고기 균납물량 확대와 홍보자금 지원방안들이다.

비용절감과 관련해서는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조사료 수급안정대책, 배합사료안정기금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낙농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 및 세재 지원 대책마련도 요구해 놓고 있다. 공공 육성우목장 설립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나, 이를 보완해서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단지 조성,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무허가축사로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지만 FTA는 생산자대책으로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다.

7. 마무리

한미 FTA 협상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이 계속되고 있



다. EU,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낙농선진국이며, 이들과 FTA 협상이 완료가 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환경, 분뇨문제들은 하루가 다르게 목장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농호수 감소로 인해 전체 농업에서 축산부문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

더군다나 최근 원유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고, 유업체들은 원유확보를 위해서 여러대책들을 세우느라 분주해 보인다. 늘 얘기하듯이 낙농은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는 진짜 위기가 닥칠지 모를 일이다. 지난 번 배추파동에서처럼 우유가 모자라는 지금은 가격이 뛰었어야 정상이나, 오히려 내려가 있다. 이는 우유라는 것이 단순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 불공정조사는 자칫 우리 농기를 포함해 낙농산업 전반으로 불똥이 털 우려마저 낳고 있어 협회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올 겨울도 여느 해 못지 않은 한파가 찾아올 것이란 기상예보도 달갑지 않다. 한파는 여름철 무더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날씨마저도 도와주지 않는 낙농현실이지만, 이제껏 그랬듯 좀 더 마음놓고 편하게 목장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그래도 놓을 수 없는 것은 생업인 젖소를 사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우유와 쇠고기를 공급한다는 신념일 것이다. 우리모두 정부가 올곧은 선택과 정책을 결정 하도록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다. ⑩

